심판론 vs 견제론…여야 정기국회 주도권 쟁탈전

19~22일 대정부질문으로 시작
이재명 수사·김건희 특검 대치전선
예산·세법·노동법 등 충돌 불가피

여야는 오는 19~22일 대정부질문 시작으로 정기국회 무대에서 격돌한다. 특히 여야의 정국 주도권 다툼에 못지 않게 내년도 예산 심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대비하고 있다.

12일 정가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야당의 '윤석열 정부 견제론'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 정당' 이미지 굳히기에 주력할 태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 지난 연휴를 전후로 수해·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민심 다독이기에 더욱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등으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내세워 민생 회복 및 윤석열정부 공약 이행 등을 위한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제1야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를 요구하는 민심을 확인했다면서 압도적 의석수를 토대로 입법·예산 심사에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11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혁 입법, 민생 예산 관철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실정이 현 경제·민생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 아래 '전면 수정'을 예고한 상태이기도 하다.

'유능한 민생정당'이라는 구호 아래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를 선정한 민주당도 상임위별로 관련 법안들을 꼼꼼히 챙겨 올해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정부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에서 '송곳질의'도 벼르고 있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이는 내달 4~24일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민주당 14일, 국민의힘 15일로 예정됐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각 28일, 29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공백이 예견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미 특별감찰관 문제부터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 여사 특검법 등으로 각종 정치적 현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은 가운데, 정책 면에서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노동 정책 분야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입법과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약자·민생·미래'를, 민주당은 '민생·민주·미래'를 키워드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이 내건 구호는 비슷하지만, 실제 각론으로 들어가면 양측의 입장차가 작지 않아 정기국회 내내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안에 '부자 감세'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에도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지난 7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법인세 협상도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지적하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도 대치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노동자 등의 파업을 계기로 쟁점법안으로 떠올랐다.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 법을 22대 입법과제 중 6순위에 배치할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정의당 역시 이 법의 정기국회 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정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법안의 면책 범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법안의 엄격한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주요 입법 사항으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꼽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법안, 쌀값 정상화 법안, 서민 주거안정 법안 등을 주요 입법 추진 사항으로 내걸었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서민 외면·부자 감세의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예고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총력 방어를 다짐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임선숙 변호사 선임

더불어민주당은최근지명직최고위원에광주에서 활동해 온 임선숙〈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

민주당안호영수석대변인은 "임선숙 지명자는 호남지역 대학 출신으로는 최초의 여성 사법시험 합격자"라며 "여성으로는 첫 번째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지부장과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을 지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의 최고위원 선임 배경에는 지역 사회에서 신망이 높고 진보적 시민사회 운동 전력 등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광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당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임선숙 변호사는 "어려운 시기에 큰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호남 몫 최고위원을 맡은 만큼 지역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충실하게 중앙당에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당의 혁신을 위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완도 출신인 임 변호사는 전남대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이우스 소속 변호사로 행정법 분야 등의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임선숙 변호사와 함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을 선정했다. 영·호남 출신 여성 인사 안배를 통해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신임 지도부 출범 9일만에 최고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며,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안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원국·홍보소통국 신설 민주 광주시당 소통 확대

민심 잡기 대대적 조직개편
임종모·박진원 국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민원국과 홍보소통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과 함께 시민·당원들과의 소통 확대에 나섰다.

12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병훈 시당위원장은 취임 이후 시당 조직개편을 통해 민원국과 홍보소통국을 설치했다. 민원국은 시민이나 당원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신임 민원국장에는 임종모(52) 전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이 임명됐다.

홍보소통국은 홍보와 공보 업무를 맡게 되며 박진원(32) 전 광주 동구의원이 임명됐다.

이들은 중앙당의 인사위원회 검증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근무하게 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민원국과 홍보소통국을 신설한 배경에는 이 위원장이 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광주시당의 문을 당원과 시민을 향해 활짝 열겠다"고 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당은 조직개편과 함께 중앙당과 협의해 블로그 형태로 운영 중인 시당 홈페이지를 개편해 당원과 시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례적으로 회계를 보고하고 시당 사무처 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한 운영도 약속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과거와 달리 시민·당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의 민심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대선에서 광주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81.5%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반영한 듯 전국 최저 투표율인 37.7%를 기록했다. 지난달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전당대회에서도 광주의 권리당원 투표율은 34.18%에 그쳤다.

현역 의원 간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됐던 시당 위원장 선거도 당의 개혁을 촉구하는 비현역 후보와 경선으로 치러지는 등 대선 이후 상당한 민심 이반이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커진 것으로 보인다. .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 시민의 정치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다"며 "중앙당에 시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고 민생과 미래의 먹거리에 관련된 부분은 광주시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국힘 비대위 당직자 회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주요 당직자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회재 의원 "최근 5년 기업들 담합으로 올린 매출 72조원"

과징금 부과액 1.7조 뿐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이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1.7조원으로 매출액 대비 단 2%에 불과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액이 71조 8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1조 7038억원으로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4%에 불과했다.

연도별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은 2018년 10조 6327억원, 2019년 3조227억원, 2020년 9조2195억원에서 지난해 25조170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8월에만 23조7654억원으로 작년 연간 수치에 근접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생 뒷전, 정치검찰 상전 윤 정부, 추석민심은 불안"

조정식 민주 사무총장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민생은 뒷전, 정치검찰은 상전이라고들 하셨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께서 말하는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 불안의 중심에는 정부와 대통령이 있다. 정부는 시늉만, 대통령은 딴청만 피우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국민께서 대통령의 행보를 자꾸 '민생 쇼'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무능 정부'보다 무서운 것이 일하지 않는 '무일 정부'"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윤석열 사단이 되어버린 검찰은 최근 한 달에만 대통령기록관을 3차례나 압수수색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급기야 사상 초유이자 역대 최악의 야당 대표 (공직)선거법 기소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회사 사정상, 매매

1. 대인동 156평, 신안동 17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문의. 010-3605-5000

투자하실분, 덕남동 임야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함,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